

보내는 곳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20-012
서울·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05호

충정로우체국

요금 별 납

받은 곳
박원순 변호사님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301호
137-070

정신대문제대책활동소식

제 6 호

발행일 1995년 1월 10일
발행인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발행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05호
우편번호 120-012
전 화 365-4016
팩 스 365-4017

찾아보기

- 2-3 PCA 한일변호인단 세미나
- 4-5 무라야마 담화 및 일본방문 보고
- 6 유엔인권소위 보고
- 7 북경여성대회 준비
- 8-9 ICJ, 보고서 발표
- 10 기타 국제소식
- 11 미주 정대협 소식
- 12 중국에 생존한 조선인 피해자 조사
- 13 국회소식
- 14-15 국내활동
- 16-17 할머니 소식
- 18-19 기타 활동 / 후원안내



▲ 일본 중심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헌법 개정' 포스터. 이러한 주장이 대세는 아니지만 종전 50주년을 맞아 이후 일본의 진로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대협 PCA 한일 변호인단 심포지엄

한일변호인단, 일본 정부에게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촉구

PCA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국내외에 이 해결방안을 알리기 위한 정대협 PCA 한일변호인단 세미나가 1994년 11월 28일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국내외의 여러 법률관계 및 이 문제에 관심있는 단체 대표, 개인들이 참석하였고 특히 일본의 PCA 변호인단 및 민간단체에서 15인이 참석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스즈키 히로시 변호사의 사회로 먼저 "PCA의 운동적 의미"(지은희 PCA 준비위원장), 김순덕 할머니의 발언,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경위 및 PCA의 유용성"(아이따니 변호사), "한일협정과 PCA"(배금자 변호사) 등의 발제가 있었다.

오후에는 박찬운 변호사의 사회로 "유엔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경위 및 PCA의 유용성"(도즈카 에츠로 변호사), "개인배상의 내용"(박원순 변호사), "일본에서의 지원활동에 대하여"(이시카와 이츠코 시인), "일본 정부의 중재수락에 관한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오사키 준리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다.

이어 국회정신대대책의원 모임의 김원웅 의원(민주당), 외무부 정신대문제 담당자인 신각수 동북아국장의 논평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이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대협 PCA 한일변호인단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한일변호인단은 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대한 배상의무는 유효하다는 것에 의논을 같이하고 이 문제의 조속하고도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재판소 제소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미나 발제문은 자료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만을 기재합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무죄의에서 국제중재재판소 권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위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정대협 PCA 한일 변호인단 구성

현재 한국과 일본에 PCA 제소를 위임받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변호사로는 유현석, 박원순, 배금자 등 37인과, 일본변호사 스즈키 히로시, 도즈카 에츠로 등 68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변호인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이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내에 PCA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대협기자회견 및 일본시민단체 PCA지지

정대협은 94년 7월 20일 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로 제소할 계획을 가지고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곧 이어 일본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현대형노예제부의 권고를 따라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의 심판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일변호인단 공동선언문

(1)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로 조직된 정대협 PCA한일변호인단(1994.11.28. 현재 한국 37명, 일본 68명)은 1994. 11. 28. 서울에서 첫 토론회를 갖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범죄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조약으로 면책시킨 바도 없으므로 일본 정부는 현재 이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국제중재재판소란?

현재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중재판소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평화회의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 대 국가 상대의 ICJ와는 달리 국가와 개인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962년 '국가와 개인간의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 규칙'이 제정된 이후 국가 대 개인과 관련되어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수는 4,000건에 이른다. 제소기간은 생방이 합의하면 빠르게 끝날 수 있으며 1년내에도 해결이 가능하다. 비용, 수속절차, 재판관 선임, 법정 장소 언어 등은 생방의 합의에 따라 협의가 가능하다. 재판의 준거법은 국제법 및 정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한다.

제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서 곧 발간 예정

정대협내 '진상규명연구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동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 문제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펴낼 이 백서가 발간되면 앞으로의 진상규명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조흥은행 304-01-120125 김신실
- 국민은행 813-01-0182-492 김신실
- 농협 053-01-176711 김신실

아래의 전선을 잘라서 본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매월 20,000원 혹은 연 100,000원 이상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본회의 활동소식과 할머니 소식, 행사안내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름
전화
주소

후원방법 1) 월회비 ()
2) 년회비 ()

본인은 귀회의 활동에 동참하고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인

14일-18일 일본방문 (PCA, 위안부반대)

10월 15일-22일 미네소타 강연 참석

(정진성, 강덕경 할머니)

10월 18일 국무부 어주국장 면담

10월 24일-25일 할머니 단풍놀이

11월 4일 정대협 사무시 기사연비등으로 이전

11월 4일-13일 5인 여류학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전시회

11월 13일 YMCA 일본연구모임 이익창립 및 강연

11월 16일, 30일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단체 가두서명운동

11월 22일 ICJ, 최종보고서 발간

11월 23일 정대협 4주년 행사

11월 28일 정대협 PCA한일변호인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12월 7일 일본어당내 중국위안부를 소위원칙

중간 보고 발간

12월 12일 정대협 기획위원회

12월 16-19일 지은희, 권희순 일본방문

12월 20일 독립기념관 방문

12월 22일 아시아연대회의 준비 1차 모임

12월 23일 도즈카 시정회 모임

12월 26일 한일문제연구소 방문

해방50주년 기념 '여성과 전쟁사료관'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정대협의 '93년 결산대표자회의에서 새로 조직, 기구에 신설된 '여성과 전쟁사료관 건립 준비위원회'는 해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여성과 전쟁사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현대 군 위안부 관련 문서, 사진, 비디오테이프, 피해자 관련 자료(돌아가신 분의 유품, 위안소에서 입수한 물건 등)를 수집중이다. 동시에 자료들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도 물색중에 있으며, 독지가나 혹은 국민들의 협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본 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나선정, 윤문자, 유춘자, 김숙임, 이문우, 이미경, 조혜란, 변영주 등이다. 한편, 사무국에서는 자료수집 등 사료관 건립을 위해 열심히 뛰어들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영문증언집 발간 예정

증언집 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한울, 1993)이 1995년 초 영국의 Cassell 출판사에 의해서 출판된 예정이다. 현재 번역작업이 한창중이며 이 영역판이 나오면 이 문

무라야마 총리 담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언급 없어

지난 8월 31일 무라야마 일본총리는 1995년이면 전후 50주년을 맞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담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미 예상되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전후 문제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보다는 이 사안과 관계없는 '평화우호교류계획'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평화우호교류계획안을 첫째 과거 역사를 직시하기 위해 역사도서, 자료의 수집, 연구자에 대한 지원등의 역사연구지원사업과 둘째는 지적교류나 청소년 교류 등을 통해서 국제각층의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교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교류사업은 필요하고 앞으로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책임은 덮어둔 채 미래지향만을 운운하는 것은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이다.

총리 담화 중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언급 없어

비록 총리의 담화 중 "이상과 같은 정부계획과 함께 이 마음을 국민여러분과 나누기 위하여 폭넓은 국민참가의 길을 함께 탐구해나가고 싶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정부 입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민간위로금안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민간모금하여 전달한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일본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명분을 더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민간모금은 일본정부의 배상의무를
면책시킬 위험성 있어

그러나 모금의 명분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며 이것은 전혀 배상,보상이라는 개념이 아닌 시혜적, 동정적 차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일본정부가 이 문제를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은 명

확하게 된다. 따라서 폭넓은 국민참가의 길을 모색한다는 허울아래 일반국민의 애국은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일본정부의 면책을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다.

피해당사자들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때문에 계속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아직까지도 법안을 만들어 나치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독일정부를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동경에서 진행된 민간위로금반대 행사들

지난 9월 15일부터 강덕경, 김순덕 할머니 등 5명의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민간단체들과 함께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금을 반대하는 연대운동을 펼쳤다. 15일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키는 집회를 성황리에 마친이후 16일, 17일 이틀동안은 위로금을 반대하는 입장과 일본정부에게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주로 펼쳤다.

16일에는 오후 2시에 일본참의원 제2의원 회관에서 피해자들과 정대협, 일본의 송신도 할머니재단을 지원하는 단체 등이 함께 모여 "우리는 왜 민간위로금을 반대하는가?" 하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석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대표들은 한 사람씩 모두 "위로금은 일본정부의 범죄성을 회피하는 것이며, 일본정부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개인배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하느라 참석한 기자들에게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금은 피해자와 당사국 국민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였다.

17일에는 오후 1시에 동경 이케부쿠로 도미시마구민센터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위로금, 과연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민간위로금반대집회가 있었다. 이 집회에 참석한 강덕경, 문필기, 박두리, 박옥련, 김순덕, 이용수, 김복선, 송신도 할머니들은 모두 한결같이 위로금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언하였고, 일본정부

금에서 다시 주거지도 없는 경기도와 부산으로 주소를 옮겨놓을 수도 없고 막막한 실정이다.

현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나눔의집이 언제 건립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고 보니, 할머니들에게는 돌아가실 때까지 집세걱정하지 않고 집주인으로부터 집비위달라는 요구에 애간장을 태워야 하는 일도 없이 사실 수 있을까? 평생을 집없이 전국각지를 떠돌아 다니며 고생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현재, 정대협은 서울시청 주택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여성교회,

할머니들과 전신 함께하는 자리 마련하여

어머니날을 기해 2년째 5월 18일 여성교회에서는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초청하여 접대하는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다. 젊은 여성교회 교우들과 할머니들은 어우러져 여성교회 교우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먹었다. 참석한 12분의 할머니들은 흥에 겨워 모든 시름을 잊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주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하는 바람과 함께 여성교회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중국거주 할머니 56년만에 고국 방문

중국 안휘성에 거주하고 있는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독지가의 도움으로 50여년 만에 고국땅을 밟았다. 지난 5월 27일 김원동씨(상도교회 장로)의 도움과 정대협의 초청을 받아 10박 11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정학수 할머니는 고향인 경남에서 15세 되던 해인 1939년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 중국 하얼빈, 산둥성, 우한 등지에서 위안부생활을 강요받다가 1944년 구사일생으로 도망하여 중국에 정착하였다. 너무 어려서 끌려갔기 때문에 모국어조차 잃어버린 전 할머니는 고국에서 조카를 만나고 같은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사는 나눔의집을 방문하여 한 때를 보냈다. 비록 서로 말이 안 통해 손짓 발짓으로, 혹은 통역으로 말할 수 밖에 없어지만 서로 통하는 것을 느꼈다. 한 할머니들이 노래를 부르자 전 할머니는 그 노래를 기억해 함께 부르자 모두들 이제껏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전 할머니는

아쉬움을 남기고 6월 7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천호한의원 윤원장, 할머니들 병 동반

천호한의원의 원장인 윤석용씨가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무료진료에 나서 할머니들께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윤원장이 이들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정대협의 권희순 총무에게서 이 할머니들이 "50여년 전 위안부 때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나서였다. 과거 '위안부' 생활로 인한 성병과 자궁 질환 등 육체적 질병도 문제지만 불안 불면증 같은 정신질환도 매우 심각한 것에 놀랐으며 윤 원장은 이 할머니들이 이런 직접적인 후유증 말고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한 채 불행하게 혼자 살아 한결같이 신경성 위장장애 같은 '췌장'을 오래 앓고 있다며 가슴아파했다. 할머니들의 병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 무료진료하기로 한 그는 개인의 무료진료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에서 할머니들이 진료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머니들,

오랫만에 단풍놀이도 힘포 뚫어

할머니들과 정대협 할머니복지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식구들 30여명이 10월 24일 1박 2일로 단풍놀이를 다녀왔다. 할머니들은 먼저 계룡산 단풍을 구경하고 유성에 들려 온천도 하고 오랫동안 만나 회포도 풀었다. 이날 한국기독교장로회 남성교회에서 차량을 제공해주고 100만원의 경비보조금을 보내주었다. 또 정대협 할머니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음식을 나누어 장만하는 수고를 해주었다.

이번 단풍놀이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남성교회와 할머니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정대협 이사

정대협 사무실을 지난 11월 4일 여성평화회의에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비당"으로 옮겼습니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05호 120-012

전화: 365-4016 팩스: 365-4017

유엔인권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식 조사 결정

'전쟁중의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내년초 남북한 동시 방문 예정

지난 8월 3일에서 13일까지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인권소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유엔인권소위는 "전쟁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해 접수한 정보를 인권 침해의 범죄자 불처벌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낼 것을 결정하고, 실무회의가 제 19차 회기중에 접수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특별보고관들이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츠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함이 없이 제 47차 인권소위에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Working Paper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 정부간기구, 민간 단체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위원장은 10일에는 의제 16 노예제에 관한 토론회 WCC 대표자격으로 일본의 아시아교류센터 반대,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 국제중재재판소로의 상정요구, 진상규명을 위한 린다 차베츠 제임명 요구의 발언을 하였다. 이번 인권소위에는 일본의 강제연행진상조사단, 북한, 도즈카변호사 등이 발언을 하였고, 총 14개 NGO 명의의 합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12일에는 '일본군 성노예: 그 해결방안'에 관한 민간단체 설명회가 WCC, IFOR, IADL 주최로 열렸다.

현재 유엔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특별보고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 문제' 특별보고관인 조아네, 기세, 그리고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조사' 특별보고관인 린다 차베츠,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스와미 등이다. 이들은 모두 앞으로 보고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신위원장은 9월초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쿠마라스와미와 면담하여 95년초에 나올 자신의 보고서에 이 문제를 다룰 것과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을 약속받았다. 또한 현재 북한과 남한 정부는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조사' 특별보고관인 린다 차베츠를 초청하여 내년초에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여 생존해있는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청취하는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정대협 유엔 관련 활동 >

1. 1992년 2월 유엔인권위에 정신대문제 상정 활동 시작
2. 1992년 5월 유엔인권위 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에 정신대문제 제기
3. 1992년 8월 유엔인권소위 참석 (이효재, 신혜수, 정진성, 황금주 할머니)
4. 1993년 2월 유엔인권위 참석 (신혜수)
5. 1993년 4월 방콕 회의 참석 (이효재, 정진성)
6. 1993년 5월 유엔인권소위 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 참석 (신혜수, 강덕경 할머니)
7. 1993년 6월 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서 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8. 1993년 8월 유엔인권소위 참석 (신혜수) -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츠 지명
9. 1994년 5월 유엔인권위현대형노예제실무회의 - PCA권고
10. 1994년 8월 유엔인권소위 참석 (신혜수) - 특별보고관 린다차베츠 임명

정대협 수요시위

- 5월 4일 117차 여성단체연합
11일 118차 여성교회 /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25일 119차 EYC
6월 1일 120차 복교인권위
8일 121차 전국연합
15일 122차 여성의 전화
22일 123차 기장여성도회
29일 124차 새세상여성노동조합여성노동조합
7월 6일 125차 재일동포인권당양곡탄집회
13일 126차 경시전
20일 127차 NCC 여성위원회
27일 128차 기독교한국침례회
8월 3일 129차 정신대연구회
10일 130차 정대협 회원단체
17일 131차 여성민주회
24일 132차 성폭력상담소
31일 133차 여성의 전화
9월 7일 134차 여성학자협의회
14일 135차 교회여성연합회
28일 136차 정대협 사무국
10월 5일 137차 여성단체연합
12일 138차 기장여성도회
19일 139차 기독교한국침례회
26일 140차 NCC인권위
11월 2일 141차 이학민주동우회
9일 142차 정대협 사무국
16일 143차 여성교회,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
23일 144차 정대협 4주년 행사
30일 145차 민족회의
12월 7일 146차 KNCC여성위
14일 147차
새세상여성노동조합여성노동조합
12월 23일 148차 정대협 사무국

그 동안 시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라야마 일본총리 방한 규탄 집회 가져

일본의 '평화우호교류계획'안이 구체화된 시기에 7월 23일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방한하였다. 방한에 앞서 정대협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교류기금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교류기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청와대 면담이 한국정부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정대협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청와대앞에서 가졌다.

무라야마 총리가 방한하는 23일에는 숙소 옆인, 장충공원에서 피해자들과 시위를 벌였다. 총리 숙소까지 행진하려던 이날 시위는 한국경찰의 원천봉쇄로 행진은 할 수 없어 집회만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날 38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과 정대협 회원들은 일본정부가 아시아교류기금 백지철회하고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무라야마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기자회견에서 전후처리를 조속히 한다는 형식적인 언급에 그쳐 6월 6일 일본의 전후처리요구집회에서 사회당위원장으로서 전후보상과 국회결의 사죄를 요구하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대협, 관방장관의 전후문제 관련단체 면담요청 거절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일본대사관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10월 30일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전후문제관련단체 면담을 요청하는 전화가 있었다. 마침 정대협 실행위원회가 열리는 중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정대협은 일본대사관에서 사전에 전혀 통지도 없이 바로 전날 공문도 아닌 전화로 요청한 것은 관례상 어긋난 것, 그리고 바로 얼마전 이가라시 관방장관이 하시모토 통산상의 망언에 대해 옹호발언을 시정할 것, 또한 정대협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계속 밝힌 점을 들어 면담을 거절하는 공문을 보냈다. 얼마후 일본정부는 10월 30일 면담한 다른 단체가 마치 일본의 민간위탁금을 찬성하는 듯한 보도자료를 내보내 관련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 정대협 활동 자료집 소개

- 자료집 1 (3,000원)
자료집 2 제1차아시아연대회의보고서(2,000원)
자료집 3 (3,000원)
자료집 4 (4,000원) - 법률문제 논의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
종군위안부문제보고서(3,000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군위안부들" (한울, 정신대연구회/ 정대협 공저, 6,500원)
"웃고름 입에 물고" (눈, 이토 다카시, 8,000원)

ICJ보고서

일본정부에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 권고

금번 11월 22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6시경, 국제법률가협회(ICJ)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ICJ는 지난 93년 3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특별조사자로 호주 필러스 대학교 법대교수인 우스티니아 돌고폴과 인도 봄베이 고등법원 변호사인 스네하 파한 제이부를 임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93년 4월, 이 두 조사자가 한국, 조선,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희생자 40명과 전 일본군인 3명, 그리고 정부대표자들, 비정부단체들, 법률가들, 학자들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서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이다.

이 보고서에서 조사자들은 한국과 북한, 중국, 네덜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등에서 10만~20만의 여성과 소녀들이 일본군대에 끌려가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으로 잔인하게 성적착취를 당했다고 발표했으며 일본의 법적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요약, 정리한 것임.)

<일본의 법적책임과 배상의무에 대한 근거>

1.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 사용, 경영, 관리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일본정부는 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명백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또한 러거 일본군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침해를 범한데 대해 현 정부는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계속해야 한다.

3. 일본정부는 부인라 아동매매금지조약을 위반하였고, 노예금지조약을 어겼으며 관습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를 지고 있다.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 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비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일본이 배상의무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라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 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라 인도에 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도 있어서 이 전에서 있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일본장병들은 이전 죄로 유죄하므로 전쟁범죄라로서 처벌되어야 할 경우였다. 조약에 의한 형사면책은 없었다. 시호는 이유로 삼아 일본정부는 책임에서 피할수 없다. 시호의 주장은 전쟁범죄라 인도에 반하는 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가해자를 불처벌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무도 지고 있다.

ICJ는 조사보고서의 결론으로 일본정부 및 관련정부와 비정부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 ICJ가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권고 >

1. (a) 일본은 가지고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위안소를 경영하고, 유지하는데 관계되었던 모든 자료를 전적으로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이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여성들이 위안소에 끌려갔고, 어떤 모양으로 유송되었고, 어떤 모양으로 위안소에서 취급받았는지에 관한 것들이어야 한다.

국회소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국회 활동 제안

지난 7월 4일, 이효재 대표 등 4인이 국회를 방문하여 민주당 외무통일위원회 소속 이우정, 이부영, 임채정, 남궁진 의원과 민주당 정신대대책모임 김원웅 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그 간담회에서 정대협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한·일 정세와 국제여론상황 그리고 할머니들의 상황과 함께 정대협의 활동들을 소개했다. 특별히, 정대협은 참석의원들에게 국회내에서, 특히 외무통일위원회에서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회활동을 제안했다.

우선, 국회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국회결의로 일본정부에게 사죄를 요구할 것, 개인배상에 대한 견해를 공식화 해줄 것, 한국정부가 전쟁범죄 및 인도와 관련된 「시호부적용 협약」에 가입토록 요구할 것 등을 제안했으며, 앞으로 국제활동, 특히 유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여론을 직접 파악하고, 느낄 수 있길 바란다는 바램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실행하려고 추진중인 중국거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고향방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협조해 줄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의 요청에 대해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하였다.

지금까지 일본국회에서는 사회당의원, 시미즈 스미코, 도이 다카코 등 다수의의원들 중심으로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규명 문제, 피해자개인에게 배상하는 문제 등을 이행할 것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여러방면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한국 국회의의원들의 활동은 극히 미약했었다.

국회정신대대책모임, 할머니 국회 초청 간담회 가져

국회정신대대책모임에서 11월 9일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초청하여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19분의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제대로 나서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국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고 할머니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김원웅의원은 앞으로 매년 할머니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자 모두 찬성하여 내년에 다시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할머니들은 국회에 초청하여 할머니들의 발언을 성실히 들어준 여러 의원에게 감사드렸다.

김원웅후원회/국회정신대대책모임, 국회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주제 전시회 가져

김원웅후원회와 국회정신대대책모임 주최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텐더홀에서 '역사에 가려진 정신대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은 김용남, 최병수, 한희송 등 젊은 작가들의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전시한 것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가졌던 행사에서 이효재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기를 촉구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 후세에 교육할 수 있도록 '전쟁과 여성 사료관'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덕경할머니이 일본의 민간기금 위로금은 절대 받을 수 없고 하루빨리 일본정부가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윤정옥 대표, 대통령상 포장

윤정옥 공동대표가 5월 29일한국정부에서 수여하는 여성복지증진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부녀복지포상을 받았다. 한국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활동에 표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효재, 윤정옥 대표, KNCC 인권상 수상

정대협 이효재, 윤정옥 공동대표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수여하는 '94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회여론화해 전후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배상운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선정했다"는 공로로 수상 이유를 밝혔다. 수상식은 12월 8일 기독교회관에서 있었다.

'강제매춘 = 강제노동' ILO보고서 채택
-일본군 '위안부' 국가배상 양적

일본의 국제인권연구회가 9월 23일 도쿄에서 개최한 연구회에서 전 인도 대법원장이자 ILO전문위원인 바그와티가 ILO전문가위원회의 보고내용을 근거로 "ILO전문가위원회의 94년 보고서에서 강제매춘이 강제노동에 해당되며 ILO의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위반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ILO 29호 조약은 ▲ 18세미만과 여성노동자의 강제노동 금지 ▲ 강제노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것 ▲ 규정위반시에는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32년 이 조약을 비준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강제노동에 해당되는지라는 문제는 비정부조직내에서 큰 논란을 벌여온 것으로 이후 ILO 등에서 공식으로 채택된다면 이후 일본은 이에 대한 국가배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아태지역각료회의의 자카르타 선언에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자 책임자 처벌요구

아태지역각료회의가 6월 7일-14일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이번 자카르타 회의에서 행동강령초안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열띤 논란이 있었다. 즉 일본은 현재 아태지역에서 전쟁 중의 체계적인 강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용삭제를 요구했으며 또한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현재 일어나는"라는 어구를 넣어서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전쟁중에 일어난 체계적인 강간을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유엔인권소위,
여성특별특별보고관 임명

스리랑카 여성으로서 법률가이자 학자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가 성폭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지난 5월에 임명되었다. 3년이 임기인 이 자리는 그동안 세계의 심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하는 책임이 주어진다.

유엔에서는 정대협이 보낸 정보와 자료를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와는 별도로 정대협은 이 특별보고

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자료를 발송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의견광고 학박

"일본군의 범죄는 일본정부가 속죄해야 합니다"라는 타이틀로 1994년 12월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신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광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전후보상실현국제캠페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의견광고는 일본 마이니치, 한국 동아일보, 필리핀, 뉴욕 타임지에서 실렸다. 한국에서는 동아일보에 실린 의견란에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염서가 정대협으로 보내지고 있다.

의견광고 찬동모금
은행 그와 조흥은행 서대문 지점
구좌명 은행
온라인 번호: 308-04-424659

마쓰시로 조선인 '위안소'의 집을 남기기 위한 학동 학박

일본내에서 1944년 가을 마쓰시로 마치 니시조의 위안소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지키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건물은 1991년 해체되고 말았지만 '마쓰시로 조선인 위안부의 집을 남기기 위한 실행위원회'가 정성껏 해체작업을 하여 그 자제를 보관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이축, 복원하여 마쓰시로 대본영에 관련된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나 '위안부' 문제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자료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자료관에는 대본영 공사 및 '위안소' 관계자의 증언, 마쓰시로 견학에 도움이 될 안내문이 수록된 자료집을 발행하고 있다. 또 매년 11월에 지하호 내에서 '마쓰시로 11.11의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 마쓰시로 조선인 '위안부'의 집을 남기기 위한 실행위원회 연락처 Fax: 043-256-0834

● 광고

2월 9일(예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이 정대협과 공동으로 노총회관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심포지움을 가진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미주 정대협 소식

워싱턴, 뉴욕 등 미국 곳곳에서 일왕 미국 방문 규탄 집회 열려

워싱턴지역정신대대책협의회(대표: 이동우)는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아키히토 일본국왕의 워싱턴 및 백악관 예방과 때를 맞춰 일요일인 12일 일본전쟁범죄규탄대회를 갖고 '은폐되고 있는 정신대문제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과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지출의 야욕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하오 4시, 백악관 뒷편 라파엣 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워싱턴지역 한국인대회'에서는 특히, 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의 발언과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주 할머니의 증언이 있었다.

대회에 앞서 하오 3시부터 아키히토국왕이 묵고 있는 영빈관(블랙어하우스)앞에 집결한 한국인들을 포함한 700여명의 중국인, 필리핀인 등 아시아계들은 수백개의 피켓과 플랭카드를 들고 반일시위를 벌였다.

한국인들을 포함한 700여명의 중국인, 필리핀 등 아시아계가 함께 모여 규탄대회 열어

전미화교협회 소속의 중국인들이 주축인 된 이 시위대와 연합으로 참가한 200여명의 한인교포들은 사물놀이패를 앞세워 영빈관 앞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라파엣 공원 측면도로를 수차례 돌면서 시위를 벌였다.

한국인들, 미국인들과 일본인까지 참가하여
문제해결 촉구하여

일왕 아키히토의 유엔 방문시기에 맞추어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한인들을 비롯해 필리핀계, 미국인과 심지어 일본인들까지 참가, 일본군 '위안부' 만행의 총책임자인 일왕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일왕의 미국방문 규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던 이효재 공동대표, 김혜원 할머니복지위원장, 그리고 황금주 할머니는 18일 보스턴 집회를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워싱턴 정대협 이동우 대표,
방한하여 할머니증언 촬영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WCCW,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대표인 이동우씨가 부군과 함께 지난 10월말에 방한하였다. 이번 방문은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기록에 남기는 비디오 촬영 작업을 위해서이다. 이동우대표는 할머니 15여분을 만나 증언을 듣고, 정대협 관계자들과 국제연대활동을 논의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가 15일 출국하였다.

미네소타에 정대협 기구 조직, 활발한 활동 전개

미국에 또 하나의 정대협 기구가 조직되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재미교포단체인 Korean American Today & Tomorrow Center와 매춘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WHISPER(Women Hurt in Systems of Prostitution Engaged in Revolt)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도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구현연합'을 지난 해 2월에 조직하여 10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네소타주에 홍보하고, 활동비를 모금하기 위한 만찬개회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본회의 정진성교수와 강덕경 할머니를 초청하여 1주 동안 기자회견, 세미나, 대학강연, 만찬, 방송출연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수요일인 19일에는 정대협의 수요시위와 시간을 같이하여 미네소타에 있는 미쓰비시은행앞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사진 / 일왕 방미 반대 시위

진상규명

정신대연구회와 윤정옥 대표,
무한지역 조선인 전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방문조사활동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한국인 할머니들이 중국에 상당수 생존해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 대표와 정신대연구회의 여순주씨, 고혜정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 일대를 찾아가 조사를 벌인 결과 우한시와 인근 농촌지역에 60대 후반 또는 70대에 이른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한국인 할머니들 9명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우한지역은 일본 패전 당시 근방의 위안부들을 비롯한 조선인들의 집결지로서 60년대까지 30여명의 생존자가 있었으나 병, 고령, 자살 등으로 거의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들은 기쁨과 충격으로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으며, 몇차례 만나면서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국내 거주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생생히 증언했다고 말했다.



홍광림할머니(좌) 하군자할머니(우)

대구, 부산, 충청, 황해 등지에서 16살-20살 초반 나이에 일본군 중화사령부가 있던 우한으로 끌려간 이들은 위안소에 배치돼 길게는 8년동안 일본군들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일본군이 패전한 후 아무 연고도 없는 먼 이국땅에 위안부들을 내팽개쳤다. 할머니들은 해방후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 땅에서 하루살이 인생으로 목숨을 이어왔다. 이들은 현재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변변한 의료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버려져있다시피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장춘월(75, 우한시 거주)할머니는 "일요일에는 평균 10-20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으며 군인을 안받겠다고 하다가 주인에게 혁대로 맞기도 했다"고 당시의 지옥같은 생활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특히 홍애진(66)할머니는 돌봐줄 사람없이 거동을 못하고 있고, 박필연(73)씨는 다리가 썩어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하군자 할머니(66): 17세때인 44년 고향인 충남서산을 떠나 중국 무한의 집단위안소로 갔다. 세계?라는 곳에는 12개가 넘는 2-3층짜리 위안소 건물이 있었다. 입구는 철문으로 닫혀 있어 출입이 금지됐고 내방은 2층 다다미로 이복, 꽃장 그리고 약봉(세척제)을 넣은 세숫대야가 있었다. 매주 월요일 병원에 가서 일본의사들에게 성병검사를 받았다. 애 못나게 하는 주사도 맞았다. 일요일에는 일본군이 바깥에서 중을 서서 기다렸다. 일본 패망후 중국에서 세 남자랑 결혼했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 임금이 할머니(71): 17세 되던해 고향 대구에서 동네여자의 뒤편에 넘어가 중국행 기차를 탔다. 중국 한구에서 해군을 상대로 위안부생활을 했다. 위안소 생활 3개월만에 정신병이 생겨 한달간 입원하기도 했다. 위안소 생활의 세세한 부분은 기억이 별로 없고 다만 군인을 받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만 생각한다. 해방후 고향가기가 두려워 한구에 눌러 앉았다. 중국인과 결혼했으나 살기가 힘들었다. 처음 임신때 유산된 이후 아이가 없다. 30세때부터 건축공으로 일했다. 벽돌이 머리에 떨어지는 번고를 당해 이가 빠졌고 지금도 머리카락이 나지않고 아프다. 남편이 아플때는 피를 뽑아서 딸아 양식을 구하기도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 조선에 가고 싶다.

정대협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들 할머니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할머니들이 북한 국적, 혹은 무국적으로 되어있고 아직도 냉전의 벽이 높아 어려움이 많다.

● 정신대연구회에서는 중국거주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곧 출판할 예정이다.

(b) 일본은 약 6개월 이내에 희생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고, 지체없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행정적 포섭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 아니면 적절한 법을 제정하여 현재 심리중인 소송을 속히 결말짓도록 해야 한다. 이 입법시에는 재판권과 규제에 대한 사전의 기술적인 이익의 청탁해야 한다.

2. 일본이 1(b)에서 제안한 제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희생자들이 충분히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의료혜택, 상당한 가족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 등으로 부족함이 없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말한다. 일본은 그들이 당한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 전적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3. 일본이 이 여성들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서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재판정을 최대한 속히 개선해야 한다. 비정부단체나 개인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구성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은 미리 법정이나 중재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드린다는 합의의 보고 또한 이를 지켜야 한다.

4. 이상의 2와 3항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여성개인의 원상회복을 위해 4만불을 지불해야 한다. 이 4만불은 권리타 본쟁에 대한 편견없이 순전히 임시조치로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이 여성들을 대표하는 비정부단체는 일본 정부에 희생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5. 만일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 현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 여성들을 대표하는 비정부단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듣기 위해 UN의 적절한 조직이나 전문적인 기관과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를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타 같이 해서 법적인 문제인 이 사건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 해당하는 협약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을 해 주도록 속히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7. 연합군의 회원이었던 나라들은 이 문제에 관계되는 소장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희생자들이 전적으로 원상을 회복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게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이 있는 직후인 9월 2일 국제법률가협회(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일본정부 및 남북한 정부, 필리핀에 위의 긴급제안을 한 바 있다.
- ICJ 보고서에 대하여 정대협은 11월 23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ICJ보고서(영문)를 정대협에 연락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2월 27일에서 3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아시아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동노력 속에서 결성된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제3차 회의가 2월 27일에서 3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6개국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도 초청할 예정이다. 회의장소는 여전도회관(종로5가)으로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1992년 8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2차는 1993년 10월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지금까지 참가한 나라는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며 3차회의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단체까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제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차별과 박해를 규탄하는 시위 열려

정대협과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6일 일본대사관 정대협 124차 수요시위를 통하여 현재 일본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일동포에 대한 테러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가졌다.

100여명이 참여한 이 집회 참여자들은 제일동포에 대한 테러가 일본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한민족에 대한 멸시의식, 민족차별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일본정부의 한민족 차별정책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우려할 사태요, 있어서는 안될 일' 하면서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이러한 폭력행위자를 검거,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조종연계 여학생에 대한 테러를 조사중인 한국인학생인권침해조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 부터 약 3달동안의 160여건의 테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테러수법도 점차 난폭해지고 있다고 7월 25일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4월이후 잇따르고 있는 테러 사건은 전통한복을 입은 학생들을 목표로 대낮에 기차역이나 학생들의 등하교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범들은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옷을 내리는가 하면, 심한 경우는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타격을 가하기도 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의 단발성 테러와 달리 이번의 경우는 3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으며 테러는 주로 국민학생들이 대상이지만 가해자들은 어린 학생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정대협 4주년 행사, 경찰의 원천봉쇄로 본행사 제대로 열리지 못해

11월 23일 있을 예정이었던 정대협 4주년 행사를 종로경찰서가 원천봉쇄하였다. 평소 주한대사관의 100미터 사정거리에서는 집회가 불허되지만 정대협 및 기타 전후문제 처리 관련 단체, 환경단체 등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가졌었다. 특히 정대협은 그동안 140여 차례의 시위를 가져와서 정대협 수요시위는 경찰에게나, 일본대사관측이나, 주변의 시민에게는

오늘이 바로 수요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관례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23일 경찰은 정대협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대사관을 아예 전경들로 도배해버렸다. 경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날 경찰은 지나가는 시민들까지 일일이 검문하고 교통을 통제하여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이 날 집회는 전경들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할머니들과 정대협 관련자들이 악식집회를 갖고, 다른 한쪽은 일본대사관에서 10여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지원집회를 가졌다. 이후 일본대사관앞에서 집회를 가진 쪽이 지원집회에 합류하여 본 집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경찰은 정대협의 엠프의 퓨우즈를 몰래 훔쳐가서 엠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 집회에 초청받은 '노래마울' 팀의 노래는 더욱 가슴에 와닿았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일본의 민간 기금 구상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였고 또한 일본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은 일본의 전후문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11.23 정대협 4주년 집회에서

이날 행사에는 사무금융노련, 참교육학부모회, 사월혁명연구소 회원들, 그리고 KNCC외 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제일동포, 일본인들, KNCC목사들과 정대협 회원단체회원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참석한 양심적인 일본인들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면서 다시한번 일본의 전후문제 처리를 강조하여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하였다.

북경여성대회 준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없이는 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어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국제서명운동 벌이기로

10월 20일부터 23일 일본 여노시마에서 '95북경여성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동아시아 여성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 NGO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주요한 사항으로 다룰 것을 사전에 결의하였고 이번 동아시아 포럼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여성과 전쟁·평화'분과에서 주요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일본의 NHK TV에서는 이 분과 토론을 1시간동안 방영하는 등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여성과 전쟁·평화'분과는 1)여성과 전쟁 2)여성과 평화 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 토의를 하였다. 먼저 논의 대상이 된 "여성과 전쟁"이라는 주제에서는 특히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전개되었다. 현재 아시아 여성 사이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것이 주요 논점이 되었다. 중국, 타이완, 일본, 한국의 대표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같은 전쟁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화교육'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타이완 대표는 타이완에 있는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현황을 보고하였고, 일본대표는 그동안 일본의 여성운동 상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에 대해 발언하였다.

한국대표로 참석한 권희순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평화"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50여년전 일어난 전쟁에 대한 법적 해결 없이, 특히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아시아의 평화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 분과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제안했는데, 이 강령은 동아시아의 여성포럼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일본여성들이 제안한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광고를 아시아 각국의 일간지에 내자는 안이 행동강령으로 첨가되었다.

이 자리에서 권위원장은 정대협에서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서명 성명서를 낭독하여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석자들로 부터 반대서명을 받았다.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공동으로 이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도 결의하였다. 이후 전체회의에서도 이 결의가 통과되었다.

제5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 큰 기대를

정대협은 1995년 8월 30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세계여성대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세계여성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1994년 3월 베이징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NGO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전국의 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여성들과 더불어 1994년 10월 21일 - 25일 '동북아시아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의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인권'으로서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최대 희생자인 한국, 북한, 중국 여성들과 가해자인 일본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시아 여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가진 일본이, 과거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또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여성들은 성실한 전후처리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할머니 소식

지금, 할머니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까?

따르릉-따르릉- "어보세요? "누구야? 윤간 사야?" "네, 할머니 몸은 어떠세요?" "맨날 그렇고 그렇지 뭐, 오늘도 지금 막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야"

할머니들께서 갈수록 몸이 병약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제는 정말로 병원과 약국신세를 지지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잔병치레를 하고 있다.

박두리 할머니는 40여년전부터 중이염을 심하게 앓아왔는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다 보니 귀의 고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머리 뒷부분으로 들어가 고여,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을 가져온다고 호소하고 있다. 나눔의집에서 갑자기 쓰러질 듯 하여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김혜원할머니복지위원장이 거의 매일 손수 죽을 쑤어서 할머니를 대접하여 주위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였다. 약 1주일 정도 입원해있다가 병원에서 더 이상 특별히 치료할 것은 없으니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라고 해 퇴원을 했지만, 아직도 그 통증은 계속되고 있다. 박두리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동안, 보임의 변영주 감독을 비롯해 회원들, 할머니복지위원들이 수고하셨다. 할머니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강덕경 할머니 또한 여전히 시장이 좋지 않아, 조금만 신경쓰면 얼굴이 누렇게 변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누운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지경이다. 매일, 매일의 삶이 아파서 병원가고, 약국가서 약 사먹고 그런 생활의 되풀이다. 정부에서 한달에 15만원씩 지원해주는 것도 병원 몇번가고, 약 사먹으면 그것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은 어김없이 수요일 12시가 되면 병석을 박차고 일본대사관 앞으로 나와서 힘차게 외친다. "일본정부는 기만적인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책임 이행하라."

전군현 할머니 사망

1993년에 3인의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금년 3월 12일 인천에 살고 계시는 전금화 할머니께서 평소 지병이었던 심부전증으로 돌아가셨다. 이 할머니는 그동안 홀로 단칸방에 살아오면서 봄, 가을이면 나물을 캐다 팔거나 새마을 취로 사업에 나가 하루하루 생활을 연명해 오셨다. 지난해에는 병원에 입원하다가 일을 나가지 못해 월세를 낼 수 없어 그대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시기도 했다. 전할머니는 1940년 17세 끌려가 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해왔다. 결국 혼자 사시다가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사망하였다. 14일 화장하고 18일 영결식을 마치고 망향의 동산에 묻히셨다. 생존해 계시는 할머니들이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안 좋아 앞으로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나눔의집에 기거하시는 할머니 중 3분, 영구임대주택 입주할 각 노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던가. 김영삼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지난해 8월부터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일제하군위안부생활안전지원법'은 생존자들에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주택법에 의하면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가족이어야 가능하고 되어있다. 그러나 군위안부생존자들에게는 그 별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나눔의집에 기거하시는 분들 중 강덕경, 손판님, 박두리할머니의 경우, 나눔의집에 기거하게 되면서 주소를 전 주민등록지인 경기도와 부산에서 나눔의집 주소를 옮겼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세분 할머니께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서울시 주택법에는 특별히 3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항목이 들어있는데, 특별법에는 독신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지만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는 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주택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3년이 아니라 1년 혹은 1달 후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그렇다고 지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키기 위한 한일연대집회

의 민간위로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피해당사자들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집회가 끝난 4시에는 참석한 모든사람들이 약 40여분간 뇌성벼락을 동반한 비오는 곳은 날씨에 비를 맞으며 시가행진을 하였다.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의 민간위로금 반대 성명서 내

11월 9일 수요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민간모금 위로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할머니들은 일본정부가 배상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기금은 할머니들을 다시한번 모욕하는 것으로 밝히고 이 돈을 일본의 거지에게나 주라 라고 말하며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아시아 지역 40여개 단체 합동 기자회견

정대협과 일본 및 필리핀 단체를 대신해서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하는 회 등의 단체가 94년 7월 18일 일본정부의 '아시아연료교류기금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동경에서 가졌다. 이들은 일본의 무책임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아시아연료교류기금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개인배상할 것을 촉구하였다.

6월 일본방문 보고

할머니들, 정대협, 유족회 모두 함께 일본정부의 진상구명,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일본방문 시위를 벌였다.

25명의 할머니와 정대협 대표단, 그리고 유족회 회원들은 6월 2일부터 8일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대응에 항의하고 일본수상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6월 6일 저녁 '전후보상조기실현집회'에 참여한 후 동경 시내의 히비야 공원까지 약 1시간에 걸쳐 데모행진을 하였으며 6월 7일, 8일 양일간 참의원회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였다.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본 정부가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따라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죄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해야함을 소리높여 전달하였다.

지난 9월 15일 오후 1시에, 일본 동경에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키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일본의 PCA연락회가 주최하였는데, 한국 정대협측에서 참석한 피해자 5명과 정대협 대표들, 한.일 변호인단과 일본 민간단체 회원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집회는 진행되었다.

본 집회에서 강덕경, 김순덕, 문필기, 박옥연 등의 피해자들은 '왜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하게 되었는가?' 하는 제소동기를 발표했고, 정대협측에서 지은희 기획위원장(PCA준비위원장)이 정대협이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한.일 변호인단 대표 1인씩 발표를 했는데, 한국측에서는 배금자 변호사가 법적 차원에 대해 발표하였다. 끝이어 윤정옥 대표가 일본변호인단에 위임장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일본변호인단의 답사가 있었다.

본 집회가 열렸던 15일은 일본의 공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장소가 가득 매워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일본에서의 PCA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느끼게 해준 집회였다.

● 무라야마 수상 취임전 일본의 친략전쟁 책임과 전후배상 주장하다.

1994년 6월 6일 일본 동경 도시센타에서 열린 전후보상조기실현집회에서 무라야마 사회당원장은 "일본사회당은 그 때문에 하타내각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있어서 친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려와 평화의 경의를 채택할 것, 진상구명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이웃 여러나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라야마 위원장은 총리가 되자마자 입장을 바꾸어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나 일본내 양심있는 인사들에게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저버리고 있다.

444 알려드립니다

고경희 전 기장여신도회 총무가 94년 10월부터 본회 총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국내에 확산시키는데 큰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권희순 총무는 본회의 아시아연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반대 국제서명운동 전개

일본정부는 과거,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 인정도, 사죄도, 법적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국제평화를 외치고 있다. 일본은 지금, 국제무대에서 경제대국으로서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 자위대 해외파병, 다량의 플루토늄 비축 등 핵무장, 군사대국화로 주변 아시아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정치대국이 되고자 하고 있다.

과거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 그 전쟁은 범죄가 아니라 해방전쟁이었다는 등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본회는 우선, 아시아연대조직을 통해,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10월말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서명운동은 95년 2월 중에 모두 수거하여 3월 유엔본부에 보내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저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대협 회원단체들은 94년 11월 16, 30일 YMCA회관앞에서 가두서명활동을 벌였다.

"빛도 없이 이슬도 없이"

그동안 꾸준히 작품활동을 계속해온 여류화가 5인(김진희, 노원희, 이경희, 이진숙, 이나경)이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지난 1년간 작업해 온 작품들을 11월 4일 - 13일, 강남 갤러리 포커스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YMCA 일본연구모임 일일찾집

지난 11월 12일 토요일 YMCA회관에서 일본연구모임은 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일일찾집을 열었다. 정신대 문제에 관한 홍보 및 피해자 할머니들과 운동을 돕기 위해 벌써 두번째 찾집을 열었다. 이 일본연구모임은 청년들이 일본에 대해 연구하고 민족주체성에 입각하여 일본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이해를 정립하고 건강한 분별력 있는 역사의식을 갖기

위한 모임이다. 50-60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정신대문제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질문하고 토론했으며 입체정 국회의원(민주당)의 격려사가 있었고 권희순 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의 정대협 활동소개 및 할머니 근황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정대협, 프로스펙스 광고 시정 요청

얼마전 프로스펙스 광고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에 등장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기존의 광고와는 달리 신선하고 충격적이라는 긍정적 평에서부터 여성을 또다시 상품화시키고, 특히 정신대문제까지 들먹이며 자사 이미지 광고를 하는 데에 대한 질타까지 있었다. 정대협은 프로스펙스 광고 로고 중 "정복당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정신대 사진과 겹치면서 이 문제를 정복과 피정복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고 국제상사측에 이 문구를 시정하든지 아니면 이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광고를 담당한 웰컴 측은 이 광고를 조기중단할 것을 약속하였다.

활동일지

- 5월 4일 스미즈 일본사학대학원 방문
내가노법무상 발언
- 7일 나츠의집학매니저, 천호환의원진료
- 9-10일 복고충무원,
정신대학매니저 및 장거수학매니저 석막산 관광
도조기번호사 방문하여 협의
- 18일 여성교회, 학매니저 정신대전
- 31일 윤정숙 대표, 보사부 포상
- 6월 2일 일본방문 (권희순, 지은희,
박원순번호사, 아미시타 영애)
- 10일 미국 방문(이은재, 김혜원, 황금주학매니저)
- 13일 중국의 정학수학매니저, 나츠의집 방문
- 7월 5일 민주당 최우종의원 강담회
6일 재이교도인권탄양금탄집회
- 15일-22일 윤정숙 대표, 일본강연
- 20일 정대협 연담토구 시위
- 23일 무녀아마방한 금탄시위
- 8월 3일-17일 신혜수위원장, 유엔인권소위 참석
9일 정대협 대표자회의
- 10일 광복 49주년 정대협 수호시위
- 29일 일본의 민간위도금 반대 금탄회
- 31일 무녀아마 총리 달력 방문
- 9월 2일 ICJ 일본군 '위안부' 문제 권고

2.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일본 정부가 "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조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제 29호 조약)", "陸戰범류규관례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였고,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개인에 대하여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3. 일본군위안부 개인배상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65년 한일협정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간 조약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설사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교보호권이며 일본군위안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 배상책임과 별도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오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계속되게 한데 따른 '불치벌'의 배상책임을 진다.

5.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않고, 또 일본 정부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CA를 통한 중재제도는 일본군위안부 개인이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위한 실효성있는 국제적 해결방법임을 확인한다.

6. PCA에 의한 해결이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로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금액은 ICJ권고대로 1인당 4만불 정도는 되어야 한다.

7. 일본군위안부개인에 대한 피해배상액은 일본군위안부로 강요된 생활을 할 당시에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전후 50년 이 되도록 일본 정부가 이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해 오므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당해온 신체적, 인격적, 재산적 손해를 모두 감안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2) 이상과 같은 결론에 따라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 및 국제연합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
(1) 일본군위안부의 진상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1993. 8. 24. 2차 보고서를 발표후 계속적인 진상조사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더이상 진상조사발표도 하지 않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일

본군위안부의 총숫자, 정책입안자, 관리, 운영 등의 명령체계 등 진모에 관한 진상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

(2)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행위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이고,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왜곡하는 현재의 민간위도금안의 추진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4) 일본 정부가 만약 배상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관한 국제법상 판단을 받기 위해 국제법상 권위있는 기구인 PCA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여야 한다. 그 합의는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빨리 하여야 한다.

(5) 일본 정부는 ICJ의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하며, PCA에 의한 해결이전이라도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로서 1인당 미화 4만불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

2.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1)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진상조사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하며 국내자료를 완전공개하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2) 한국 정부는 65년 한일협정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3)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PCA에 의한 해결을 권고하여야 한다.

(4)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일본의 전후배상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한국 정부는 ICJ의 권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3. 국제연합에 대한 권고

우리들은 국제연합이 ICJ의 권고를 지지해 줄것을 요구한다.



사진 1 / 한일반포인단 심포지엄